

‘말뿐인 상생’ ...광주-전남 현안마다 ‘으르렁’

한전공대 이어 어린이재활병원도 유치 경쟁
시,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 손배소 대응
군공항 이전·혁신도시발전기금도 진척 없어

민선 7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현안마다 대립하면서 ‘상생’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시작으로 어린이재활병원 유치전,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손배소 등 중요 현안마다 충돌하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보전

복지부가 공모중인 전남권(광주·전남)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유치를 놓고 광주와 전남은 각자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어린이 재활병원은 민간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재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아동 가족의 의료수요에 부응하려는 사업이다.

지난해 1차 공모에도 나섰던 광주시는 최근 북구 양산동에 시유지 1,000㎡를 사업부지로 마련하고 운영 의료기관 공모에 나섰다. 오는 23일까지 사업기관을 공모로 찾아낸 뒤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시비 투입 규모도 215억원까지 늘려 국비를 더한 전체 사업비를 293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뒤늦게 어린이재활병원 유치에 나선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공모사업에 뜻이 있는 의료기관 찾기에 나서는 등 광주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는 지난해 공모에 당선된 대전

시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는 등 어린이재활병원을 전남으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놓고도 광주시와 전남도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가 청정빛고을(이하 한국지역난방공사)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SRF 연료수급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지난 1일 ‘보조참가’ 형식으로 참여키로 결정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시는 법률자문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한 결과 금융권의 대응에 따

라 광주 SRF 사업이 해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현재 진행 중인 청정빛고을의 소송 보조참가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총 946억9,000만원을 들여 1일 400t 생산 능력(2기)을 갖춘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2017년 1월부터 가동했지만 광주의 SRF 반입 거부로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2017년 12월 중단되면서 광주 SRF 공장도 2018년 2월부터 멈춰섰다.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도 별다른 진척이 없

다. 최근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이전부지를 연내 선정한다는 발표와 대조를 이룬다. 지난달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가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벌이는 등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관한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서 향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부지가 결정된 한전공대를 두고서도 시도가 과도한 유치전을 벌이면서 한전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대신 나주 등 지자체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만 남겼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광주~나주 간 농어촌버스 노선 확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등 현안마다 엇박자를 내면서 시도의 ‘말뿐인 상생’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황애란 기자



고3 전국학력평가 2019년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0일 오전 광주 광덕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신중하게 문제를 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출제 주관한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국어와 수학(가형/나형),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 5개 영역에 걸쳐서 실시됐다. /김태규 기자

‘LINC+’ 육성사업 광주·전남 대학 6곳 선정

산학협력 고도화형-전남대·조선대·목포대·호남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광주대·목포해양대 통과

국고 2,500억원을 투입해 산업계 친화적인 대학을 키우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에 광주·전남지역에서 전남대·조선대·호남대·목포대가 포함됐다. 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하고 채용과도 연계하는 ‘사회맞춤형학

과 중점형’에는 광주대와 목포해양대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0일 오는 2021년까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plus) 육성사업을 수행할 대학 75개교를 선

정했다. 교육부는 우선 1차 단계평가에서 첫 2년간 지원받았던 75개 대학의 사업실적을 평가해 상위 80%인 61개 대학을 통과시켰다. 1차에서 떨어진 14개 학교는 새로 진입하겠다고 신청한 27개 학교와 함께 2차로 비교평가를 받았다. 비교평가 최종 결과, 지난 2년간 지원받았던 학교 중 동신대·남부대 등 7개교는 탈락했으며, 1단계에서 탈락했

다가 평가를 받은 조선대와 목포대 등 7개교는 가까스로 회생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또 산업체로부터 요구받은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에서는 광주대와 목포해양대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2021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산학협력 고도화형을 수행하는 대학은 1개교당 평균 37억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은 평균 10억원을 지원받는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참여하는 학과 규모와 범위, 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조기철 기자

진료비감면 혜택 70세로 상향

복지부 건강보험5개년 공청회

정부가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2023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초고령시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천만원 이하 분리와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2023년)을 10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 혁신방안,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전 생애에 걸친 건강보장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의 세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단속한다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책 마련

광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 단속을 벌인다. 시는 10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기획단(T/F)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대기측정소 신규 설치 등 미세먼지 관련 시급한 현안이 다뤄졌다. 광주시는 국비와 시비 각각 4억 8,500만원 등 총사업비 9억 7,000만원

으로 오는 11월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스템 설치와 안정화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5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 노약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보건용 마스크 75만매(3억5,000만원)를 구매해 배부한다. 출·퇴근이나 점심 시간대에는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마스크를 배부하며 차량 2부제 참여 등 미세먼지 저감·대응책을 홍보한다. /황애란 기자

신문의 날 대체휴무 12일자 쉽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대한민국 100주년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새로운 100년의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19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45 8·15 광복

1960 4·19 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

1987 6·10 민주항쟁

1998 IMF 외환위기 극복

2016 촛불 시민 혁명

2018 남북정상회담(판문점, 평양)

2019 3·1운동 100주년

2019 4·11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100주년